

명사칼럼

영세 자영업과 비정규직 바다에 구명정을 띄우자



정장선
국회의원
지식경제위원장
02-788-2985

2008년 한 해 우리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 그리고 그 고단한 풍경은 새롭게 한 해를 설계하고 희망을 다져야 할 지금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경제상황이 지난 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미국에서 촉발돼 전 세계로 번진 금융 위기·경제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 없이 높았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결정적으로 꺾인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관성 없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정부의 대응과 일회성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위기상황이 기증됐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모 경제학자의 말처럼, ‘폭풍우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쥐어주고’ 한가하게 자기 사랑이나 늘

이놓지 말고, 새해에는 정부가 그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점검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 역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 되었든 민의의 진당이라는 국회에서 최근에 벌어진 부끄러운 모습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한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 정치에서 국민과 민생은 실종된 지 오래이다. 국민을 볼모로, 민심을 왜곡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일방통행하는 불행한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축년에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눈물을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우리나라 실물경제 진반을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끄러운 새해 다짐을 해 본다.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실천한 마음으로, 18대 국회 첫 해를 마감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자원 빈국이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권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고유가에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 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시행했지만, 고유가의 근본 원인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는 비효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렇게 효과가 불분명한 방안에 투입하는 것이 옹바르냐 하는 분세제기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1·2차 오일쇼크를 겪는 과정에서 연료효율을 높이고 '쓰긴 쓰되 잘 쓰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장 급한 불을 끄면 된다, 안 쓰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기용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녹색성장'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가 일관성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할 때는 국가 전체가

에너지 위기와 절감을 부르짖더니 최근 유가가 하락하자 에너지 절약 얘기가 쑥 들어갔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자원효율 향상,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들도 정부가 과연 지원을 계속할 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매년 정부에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실천계획과 성취도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임기 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막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판단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자 수가 최근 내수진체로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주(자영업자)는 총 5백94만5천명으로 2007년 상반기에 비해 7만3천명 가량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가 6백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신용카드 사태로 내수경기 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1년새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했다. 도매·소매업 대출은 2007년 1/4분기 50조원에서 2008년 1/4분기에 61조원으로 늘었다. 숙박·음식점업도 이 기간 동안 14조원에서 17조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자 외 기구의 2008년 1분기 월평균 소득은 27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399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절대수치는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06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 대비 32.89%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OECD 국가 중 4위). 자영업자들, 특히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락하고 있는 이유는 △자영업자 공급 초과, △경기침체와 (교육비·노후자금 등의 지출비용 상승에 따

른) 소비여력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 스(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유통기업의 진출로 인한) 유통채널의 변화, 스경쟁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으로 소상공인 특별보증제도 등을 통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금융지원만으로 부족하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신통치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사의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즉 교육과 재교육, 사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정부정책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인력 10% 감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각하게 깊어봐야 할 것이다.

모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를 '비정규직의 바다'라고 표현했다. 2008년 3월 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비정규직 숫자는 858만명인데 비해 정규직은 741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근로자의 54%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 사회적 차별, 저임금의 3중고에 신음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분세는 비정규직에서 빠져나와 정규직으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행일 정도이다. 비정규직의 더 큰 고통은 지식의 비정규직 대물

림이다.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는 정규직 부모를 둔 사람과의 교육·취업 등 경쟁에서 연세일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밀려난 비정규직의 자녀들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굴레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부터 아들, 딸까지 한 가족이 모두 비정규직인 경우가 더 이상 낮칠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의 문제일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분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20대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0~40대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진출해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주택청약저축이 없고 자가용이 없고 결혼을 못하는 '3무(無)세대'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작금의 현실이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20대 비정규직은 193만명, 정규직은 191만명, 반반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30~40대 비정규직 가장들은 가족들 삶까지 짊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858만명 중 부양할 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601만명.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된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곧 서민경제의 위기가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된다.

차가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나무 조각 하나 던져주고 일어서 헤엄쳐 나오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구명정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물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소의 해, 기축년이다. 소는 예로부터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2009년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점차로 나아져서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기술표준 2009.1

